

4
2000-2010년

의료체계의 변화와 대한의사협회

의약분업 사태, 저수가 왜곡된 한국의료 모순 드러내
구조적 문제 여전…필수의료·의료전달체계 붕괴 부작용

의약분업 실시를 앞두고 의사단체와 의사들은 충분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면 네 번의 전국집회 (1999년 11월 30일 장충체육관 올바른 의약분업 쟁취를 위한 범의료계 결의대회, 2000년 2월 17일 여의도 문화마당 잘못된 의약분업 바로잡기 전국의사대회, 2000년 6월 4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잘못된 의약분업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결의대회, 2000년 8월 31일 보라매공원 올바른 의약분업 실시 위한 전국의사대회)와 두 번의 파업(2000년 4월 4~6일 1차 파업, 2000년 6월 20~25일 2차 파업)을 통해 '선 보완, 후 시행'과 '완전 의약분업'을 주장하고 나섰다.

의약분업 시행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이 계속되면서 저수가 체제 속에서 왜곡됐던 한국의료의 구조적 모순이 줄줄이 모습을 드러냈다. 의사 사회는 의약품분류 문제는 물론 약사의 불법 대체조제와 임의조제를 비롯한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신뢰할만한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데 분개했다.

의약분업 사태를 접한 언론은 '의약품 뒷거래 연 1조 3000억원', '제약사, 병원 검은 사슬 심화', '뻥튀기 보험약값 환자 바가지', '의약품 거래 부조리' 등 의료계 비리에 초점을 맞췄다. 심지어 '의도(醫盜)'라는 제목까지 등장했다.

약가 마진을 통해 이윤을 남길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의료제도 속에 놓인 의사들에게 '도둑'이라는 주홍글자를 새겼다.

주홍글자의 굴레는 의료계를 불신하고, 부정적으로 인식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의약분업을 통해 불거진 구조적인 문제는 개선이 아닌 개악으로 치달았다. 정부는 잘못된 판단으로 저수가 체제를 개선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필수의료와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라는 부작용이 불거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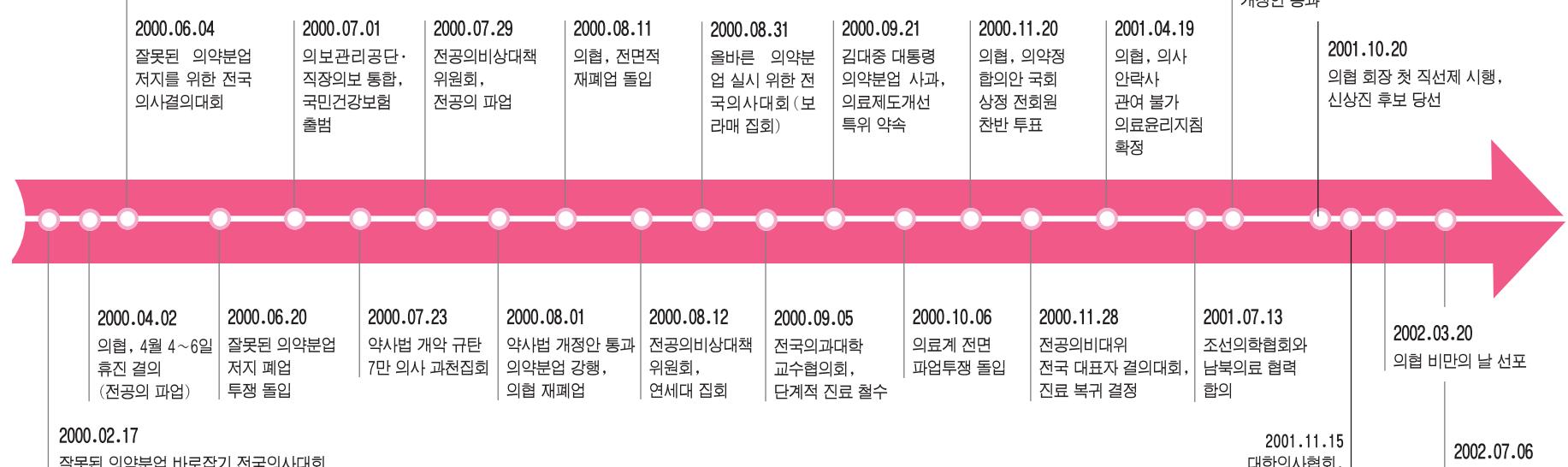
의협은 의약분업 투쟁 과정에서 근거와 자료의 중요성을 깨닫고 2002년 의료정책연구소를 개소, 의료정책과 의료제도 연구 조직을 갖췄다.



◀ 2000년 6월 4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열린 '잘못된 의약분업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결의대회'. 전국 의사들은 '의권쟁취'와 '국민건강'을 외치며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폐업을 강행하겠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의협 역사상 첫 직선제 회장 선거가 선보였다. 제32대 의협 회장으로 신상진 후보가 당선됐다 (2001년 10월 20일). ▶



▲ 의약분업 투쟁의 여파 속에 의료계는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환경의 틀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객관성을 담보한 의료정책 대안을 제시하자는 취지에서 2002년 7월 6일 의료정책연구소를 개소했다.

▲ 2000년 2월 17일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열린 '잘못된 의약분업 바로잡기 전국의사대회'에는 전국에서 4만여 명의 의사회원이 참여했다. 의료계는 정부의 강제 의약분업제도 인해 환자의 불편과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될 것이라며 전국 병의원 휴진과 의사면허증 반납 등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